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과제 산적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관련 된 경찰 수사가 11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정에서 원·하청 업체들은 서로 ‘네타트 공방’을 하고 있고, 관련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상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안전 대한민국 건설’은 요원해보인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쟁범죄수사대는 14일 신축 건물 붕괴사고 관련 비위 분야 4명을 추가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4명은 철거 업체 선정 대가 급품 공여 한 혐의자 2명, 등기 생략형 토지 거래 (미등기 전매) 혐의자 2명 등으로 부동산 상승기특별조치법 위반, 배임수증제 등 혐의가 적용됐다.

철거업체 대표 등 2명은 철거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급품을 주고받

은 정황이 확인됐다.

토지매입 업체 대표 등 2명은 아파트 건설 부지를 사들인 후 양도세 등을 포탈 할 목적으로 등기를 생략한 혐의다.

경찰이 4명을 추가 송치하는 것으로 붕괴사고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사고 관련 처벌 대상자는 총 21명으로 늘었다.

앞서 광주 경찰은 지난 1월11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에서 6명이 사망(실종 후 사망 발견)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곧장 수사관 89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구성, 22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이후 강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고 직접 책임자들과 비위행위자 일부 등 총 17명(6명 구속)을 송치했고, 이들은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무원 1명 입건해 수사했지만, 최종 불송치 결정되기도 했다.

수사당국은 붕괴사고 주요 원인으로 ▲구조검토 없이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39층 바닥 타설 시 하부 3개 층 등바리 철거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등을 붕괴 원인으로 지목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붕괴사고 책임자에 이어 비위 분야 수사대상자들 조사해 미등기 전매 행위와 업체선정 비위를 추가로 규명했다”며 “이들 비위 행위자 4명 송치를 마지막으로 신축건물 붕괴사고 경찰 수사는 모두 종료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과제는 산적해있다.

먼저 책임자 처벌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지난 4월 우선 송치된 17명과 법인 3곳(현대산업개발·가현건설산업·건축사사무소 광장) 등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지만, 원청인 현산과 하청업체 가현 등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쏟아지고 있지만, 관련 논의는 개점 휴업중이다.

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에 필수적으로 등록말소 처분을 적용하고 일정 기간(5년 또는 10년) 건설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에 이어 연속으로 2차례 붕괴 사고를 낸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고스란히 담긴 법안이었다.

불법 재하도급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도 제시됐다.

불법 재하도급이 적발되면 현행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등록말소 등 가장 강력한 처분을 해달라는 국토부 요청을 받고도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미루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 법 개정안도 나왔다.

국토부나 사고 발생 지역 해당 지자체가 사고를 낸 건설사에 직접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부실 감리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도 추진됐다.

이렇듯 수많은 법안이 이렇게 발의됐지만 정작 이들 중 상당수는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건설안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실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쯤 법안들이 상임위에 상정돼 법안소위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복기자·연합뉴스



소복이 쌓인 눈 을 들어 가장 추운날씨를 보인 14일 오전 광주 남구 병림동 아파트 단지에서 한 시민이 차에 소복이 쌓인 눈을 쓸어내고 있다. /김애리 기자

지방의원 이어 퇴직공무원 ‘경로당 특혜’ 의혹 참여자치21 “‘몰랐다’ 공무상 배임”…진상조사 촉구

최근 광주 자치구들이 전·현직 지방의원과 퇴직공무원 친목단체에 경로당을 특혜 지원해왔다는 의혹이 연달아 제기되면서 지역 시민단체가 거세게 비판했다.

14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치평동 한 경로당에 간이 칸막이를 경계로 내부에 광주시 행정동우회 사무실이 마련돼 있다.

경로당 입구에는 ‘광주시 행정동우회’라는 큰 간판이 걸려 있고, 경로당 회원은 서구에 주소지를 둔 동우회 회원 88명이다.

해당 경로당은 2017년 서구가 동우회 회원으로부터 경로당 지정 신고서를 받아, 현장 조사를 통해 면적과 이용 인원 등을 확인한 곳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이곳 내부에 행정동우회 사무실이 들어서면서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경로당이 퇴직공무원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구는 현재까지 비품과 운영비(매달 39만원) 등 경로당 보조금으로 2천500만원 가량을 지원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과 비품 조사 등을 해왔지만 그동안 사무실에 대한 제재나 지적은 없었다.

이에 앞서 광주 남구에서도 전직 구의원 28명으로 구성된 의정동우회 전용 경로당이 설립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경로당은 남구 진월동 한 건물 2층

을 임차해 조성된 곳으로 전·현직 남구 구의원의 의정동우회 회원 중 65세 이상 전의원 28명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남구는 경로당 설치 예산으로 임차 보증금 5천만원, 리모델링비 1천900만원, 가전제품 등 물품 지원 1천700만원을 지원했다.

이를 두고 남구가 편법으로 의정회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방의정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우식 참여자치21 처장은 “조례와 시행령 위반이 아니라는 관계 공무원의 주장과 특혜 지원을 했으면서도 이를 면피하기 위해 문제 상황을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공무상의 심각한 배임”이라며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정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실태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재영기자

광주·전남 고독사 ‘위험수위’

市, 10만명 당 전국 평균 상회…道, 매년 증가

최근 5년 동안 광주·전남에선 홀로 살다 숨진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광주·전남에서 고독사로 세상을 떠난 이들은 각각 551명, 503명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광주는 2017년 105명, 2018년 104명, 2019년 113명, 2020년 118명, 2021년 111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 동기간 전남은 77명, 87명, 101명, 114명, 124명이 사망했다.

광주의 경우 인구 10만명 당 고독사 발생 현황도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전국 현황은 2017년 4.7명, 2018년 5.9명, 2019년 5.7명, 2020년 6.4명, 2021년 6.6명으로 집계됐다. 동기간 광주

는 7.2명, 7.2명, 7.8명, 8.2명, 7.7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남은 4.1명, 4.6명, 5.4명, 6.2명, 6.8명이 고독사로 사망했다. 2021년을 제외하곤 평균 이하를 기록했지만,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날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제1차 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구’ 내용에 대한 주제발표 후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관계부처·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금번 실태조사는 고독사라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위기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이번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조해 2023년 1분기까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는 지난해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 예방법)에 근거해 실시된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경제적 문제, 사회와의 단절, 1인 가구 증가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갈수록 늘어난다고 추정되는 고독사 실태를 국가 차원에서 조차해 공식 통계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독사 예방법에 따르면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가리킨다.

/안재영기자

‘대설주의보’ 광주·전남 빙판사고 잇따라

북구 임동오거리 차량 4대 연쇄 추돌 등 각종 피해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밤사이 광주·전남지역에 눈이 쌓이면서 차량 운행에 차질이 생기고 빙판길 사고도 이어졌다.

14일 광주·전남 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23분께 광주 북구 임동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혔다.

달리던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뒤따르던 차와 연쇄 추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오전 8시17분께 강진군 성전면 국도의 한 터널에서 3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 1대가 빙판에 미끄러져 옹벽을 들이받았다.

뒤따르던 4t 트럭이 이 승용차를 들이받는 2차 사고까지 났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각 장성과 나주에서 승용차와 1t 화물차가 빙판길과 눈길에서 미끄러져 도랑으로 빠지는 등 운전자와 동승자 등이 다쳤다.

하늘길과 바닷길 운행도 차질을 빚었다.

이날 오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여수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항공편 1편이 결항하면서, 여수공항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항공편도 결항됐다.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해 여객선이 다니는 전남 지역 모든 항로(53개 항로 86척)가 통제되기도 했다.

/안재영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화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ra.com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안전기원제 고사

시 제 상

제 사 상

고 사 상

제사나라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자매회사: 국제의식산업(주) 출장위폐

CMYK